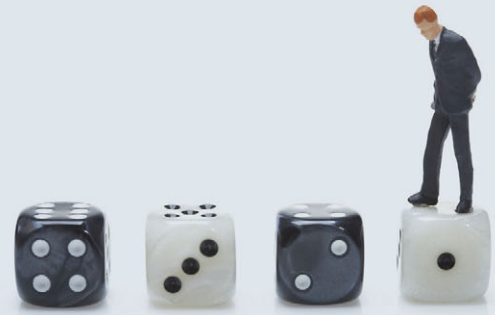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 벤처가 답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2008년 들어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하반기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일자리 증가는 21만 명 내외에 그쳐 목표치 35만 명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증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은 하락하고 고용율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금년 들어 일자리 창출이 둔화된 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은 이미 자본집중·노동절약적 성장구조로 전환하였으며 수출은 국내 부품소재 기반의 미흡(글로벌 소싱의 확대 등) 등으로 수출증가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면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부품소재 중소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이 시급하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기업과 정부의 보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벤처기업 활성화이다. 기술창업과 같은 질 좋은 창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직접 경험한 바이다.

2007년도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벤처기업 평균 근로자 수는 31.6명으로 2005년 대비 15.7%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연구 인력이 업체당 평균 2005년 6.8명에서 2006년 8.2명으로 증가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생성·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거듭되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구직자와 “사람이 없다”는 기업의 딜레마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본지는 본격적인 취업시즌에 앞서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심는다. -편집자주

글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표 1〉 벤처기업 평균 고용동향

구 분	2005	2006
근로자	27.3	31.6
정규직	25.3	29.1
(연구인력)	6.8	8.2
(비정규직)	1.4	1.8
(외국인 근로자)	0.6	0.8

자료 : 벤처산업협회 2007년 벤처기업 정밀실태 조사

2008년은 이른바 ‘벤처 2.0’ 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2007년 말 논란 속에 10년간 연장되었다. 앞선 10년과 비교하여 2008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2기 벤처기업 정책은 접근방식에서부터 달라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방안이 자리잡고 있다.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벤처창업의 배태조직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는 지식 창출의 원천인 대학·연구기관에서 분사(spin-off)되는 기술창업이 매우 필요하나, 2004년을 정점으로 교수·연구원 창업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4년 전체 벤처기업에서 교수·연구원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9.5%에 달했으나, 2007년에는 12.4%로 격감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대학원의 기능을 창업보육, 투자유치, 경영자문 등 전문 인력 양성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및 연구소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직접 창업기회를 확대 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설립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중견벤처기업(가칭)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향후 벤처기업 중에서 일정 업력 이상이거나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중견벤처기업으로 분류하여 기존 벤처기업 정책 중에서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졸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연구개발투자, 인력지원, 글로벌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이 중견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 등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성장기를 거쳐 성

숙기에 접어들면 성장이 정체하여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력 5년차 기업의 68%가 사업실패에 직면하거나, 코스닥 상장 후 3년차가 되면 42%의 기업이 사업정체 및 사업실패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실패 또는 성장정체기에 접어든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M&A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벤처관련 협회나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술의 확산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중개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기술자문네트워크, 기술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업종별 협회, 다양한 연구기술조직 등이 대표적 중개기관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조직이 설립되어 있으나, 초기의 설립목표에 도달한 기관은 그리 많지 않아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변화와 인력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 유관기관의 기능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및 훈련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특성상 교육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력양성 및 기술훈련에 집중한다면, 보다 많은 인재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창업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CEO교육과정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인은 물론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글로벌창업아카데미(global entrepreneur academy)를 설립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